역사왜곡 유죄에도 판치는 '왜곡 댓글'

'전두환 유죄' 판결 기사 댓글 보니

막가파식 주장·가짜 뉴스 남발
희생자 모독 댓글도 잇따라
5·18 특별법 조속 통과로
터무니없는 왜곡 단죄해야

법원이 지난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과 하루만에 인터넷과 온라인상에서는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글이 쏟아졌다.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 댓글을 분석한 결과,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부정하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5·18 당시 희생자를 모욕하는 댓글들로 가득했다.

"'광주 헬기사격 있었다" 전두환에 징역 8개월 집유 2년'이라는 제목의 중앙지 기사에 달린 187개의 댓글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상위에 고정된 댓글은 헬기사격을 부정하는 내용이었다.

'dal1****'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기총소사한 헬기가 몇번 헬기고 조종사는 기관총 사수는? 피해자는? 유령이냐? 아무도 없는 죄 막 뒤집어 씌워라'라는 댓글을 올렸다.

'neot****'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쏜놈도 없어, 맞은 놈도 없어, 피탄 흔적도 없어 있는 건 오직 홍어들의 구라와 문재인 정권의 조사, 오히려 21일 군헬기 피탄돼 추락 직전에 귀환함'이라는 글을 올렸다. 군이 국민을 상대로 헬기 사격을 했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헬기사격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글을 쓴 것이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비하성 댓글도 잇따랐다. '검증도 안된 죽은 신부 명예훼손이 이렇게도 큰 죄인 줄 이제 알았네 ~', '예수가 부활해 신부 앞에서 쐈냐?'는 등 피해자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글들이 적지 않았다.

5·18 희생자를 '홍어'로 비하하거나 무장 간첩 폭도로 지칭해 글을 올린 경우도 여전히 많았다. 중앙 통신사에 올라온 관련 댓글 764개 중 250여개가 삭제됐고 453개의 댓글이 남았는데, 여기에서도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댓글이었다. 'kbt7****'라는 누리꾼은 '헬기사격? 광주지방법원이니까'라며 아예 지역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만한 글을 올렸다.

이들 댓글을 분석해보면 '폭도'라는 단어가 18개, '폭동' 25개, '반란'은 37개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과 단어들로 가득했다.

사법부가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시기에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음에도, 이같은 왜곡 댓글들이 근절되지 않는 행태가 지속되면서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의 시급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역사왜곡처벌법)을 마련, 현재 국회 국방위 법사위에 상정한 상태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전씨에 대한 재판은 5·18의 가치와 정신을 다시 알리는 재판"이라며 "남은건 5·18왜곡 처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왜곡과 폄훼 세력이 시대 착오적인 주장을 펼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진단검사 받는 학생들 1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 학교 재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재학생과 교직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출생신고조차 안된 영아…구멍 뚫린 복지

'냉장고 영아 사망'으로 본 복지 실태

취학 전 아동 소재·안전만 확인
영·유아 조사 없어 주검 파악 못해
아동 방임 방치…돌봄정책 개선 시급

여수에서 발생한 '냉장고 신생아 사망 사건' 〈광주일보 11월30일 7면〉은 지역 사회의 무관심과 복지정책의 허점이 빚어낸 비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매년 100조가 넘는 복지비를 투입하고도,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일 여수시와 여수경찰 등에 따르면 여수시 여천동 모 아파트에서 발견된 생후 2개월 가량 된 신생아 시신은 무려 2년 넘게 냉장고에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엄마인 A(43)씨는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자치단체측도 초등학교 취학 연령의 아이가 아닌,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연령인 아이에 대한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 존재 사실조차 몰랐다. A씨가 일하러 나간 동안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데도, 돌봄의 손길은 받지 못했다.

아동보호체계의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영·유아 전수조사는 시도조차 안해**=정부와 교육청, 자치단체는 취학 연령인데도 학교에 오지 않는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매년 진행중이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연령인 영·유아에 대한 조사는 시도조차 없었다.

출생신고만 있을 뿐 예방접종 등 의료 기록이 전무한 영·유아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처럼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경우를 찾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A씨는 미혼 상태로 아이를 낳았고 첫째만 출생신고를 했을 뿐 쌍둥이 남매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아동(0~17세)은 51만8150명(광주 25만2846명, 전남 26만5304명). 이들 중 지난해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 수치는 2890건(광주876건 전남2014건)에 이른다.

등록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인 만큼 A씨의 사례는 앞으로도 포함되지 않는다. 영·유아들이 초등학교 취학 연령의 아이보다도 약하고 대응력이 없어 학대나 방임의 피해를 입기 쉽다는 점에서 전수조사 및 조기 발견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돌봄 정책도 말 뿐**=여수 냉장고 신생아 사망 사건은 돌봄 혜택의 문제점도 드러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올해만 해도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우려, 대체인력을 투입해 맞벌이 부모를 비롯,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복을 메우는 데 총력을 쏟아왔다.

하지만 A씨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A씨의 아동 방임 실태는 '밤이면 다른 집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 집에서 악취가 나는 등 아동방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A씨의 큰 아들 B군은 밥을 먹지 못해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구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라면 형제' 화재 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9월 지역 내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지만 A씨 가정은 대상에서 빠졌다. A씨는 경찰에서 "새벽시간까지 일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경우 36개월 미만 아이에 대한 돌봄 지원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아동 돌봄 공백을 메우는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런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나올만하다.

◇**정책 따로, 현장 행정 따로**=탁상 행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현장 조사 및 아동과 학대 행위자 분리조치 등을 민간 기관이 수행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키로 했었다.

지자체가 보유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으로 실질적인 학대 조사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실질적 구호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었다. 하지만 여수 사건에서는 전혀 가동되지 못했다.

정부 정책대로라면 지난 6일과 10일 주민 신고가 이뤄졌을 때 아동학대 조사, 상담 등을 위해 전국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을 가야 했지만 여수시에는 전담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

결국 동사무소 직원이 현장을 찾았지만 A씨 거부로 현장조사조차 못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에야 여수시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고 다시 10여일이 지난 20일에서야 고발로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회의원 청탁 명목 금품 챙겨
주간지 본부장 출신 60대 징역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청탁 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주간지 본부장 출신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하고 313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광주시 동구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에게 "국회 교문위 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 K대 상황을 문제삼도록 하겠다. 섭외해야하는데 경비가 들어간다"며 7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한 청탁 비용 명목으로 313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랫동안 K대학 학교법인과 설립자 등을 대상으로 분쟁을 벌여온 B씨에게 국회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받은 뒤 당시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을 만나 B씨 의견을 전달하는 등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및 보좌관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국회의원 직무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전력, 범행을 부인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다, A씨 알선행위가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0타경8300	1	북구 호동로99, 101동 15층 1501호 96.64㎡	아파트	162,000,000 162,000,000	
2020타경8614	1	북구 매곡로93, 103동 8층 807호 [매곡동,매곡동대주피오레아파트] 84.9667㎡	아파트	277,000,000 277,000,000	2020타경69657[중복]
2020타경8966	1	북구 용주로30번길16, 12층 1202호 59.94㎡	아파트	104,000,000 104,000,000	
2020타경69244	1	남구 봉선로175번길6, 204동 9층 907호 84.96㎡	아파트	340,000,000 34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0타경9679	1	나주시 중앙동 32-7 289㎡	대	181,533,900 181,533,9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나주시 나주로 163 75.70㎡ 부속건물 창고 14.55㎡ 제시외 창고 등 27㎡	단독주택		
		나주시 중앙동 32-8 3평	대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20타경68197	1	서구 상무버들로53번길 22-21 1층95.04㎡[2가구] 2~3층각95.82㎡[각2가구]	다가구주택	454,061,640 454,061,640	일괄매각.제시외태양광설비매각제외
		서구 유촌동 846-5 191.7㎡	대		
[대지/임야/전답]					
2020타경5950	1	영광군 백수읍 상사리 1550-5 2960㎡	양어장	71,774,000 71,774,000	일괄매각[목록1,3]
		동소1550-11 480.7㎡[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2	동소 1550-6 3535.4㎡	답	70,708,000 70,70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6052	1	화순군 춘양면 양곡리 44 1610㎡[공유자윤병선지분2/19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연고미상분묘1기소재]	전	2,880,990 2,880,99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2	화순군 춘양면 회송리 385 174㎡[공유자윤병선지분2/19전부] 제시외 창고 등 3.33㎡	대	4,110,110 4,110,11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화순군 춘양면 회화길95-1 82.53㎡[공유자윤병선지분2/19전부][물건번호2:지분매각]	단독주택		
	3	화순군 춘양면 회송리 485 1091㎡[공유자윤병선지분2/19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1,607,760 1,607,760	물건번호1과비고동일
	4	동소 488 3164㎡[공유자윤병선지분2/19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4,662,700 4,662,700	물건번호1과비고동일
2020타경7642	1	담양군 대덕면 운산리 399 1372㎡[공유자정래겸지분2/19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2,743,980 2,743,98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2	동소 404-1 605㎡[목록1과지분동일.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1,801,500 1,801,500	일괄매각.목록2,3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동소 404-2 536㎡[목록1과지분동일][물건번호2:분묘소재로인해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임야		
2020타경7642	3	동소 507 3435㎡[목록1과지분동일.농지취득자격증명요,분묘소재로인해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전	4,338,960 4,338,960	물건번호1과비고동일
	4	동소 518 1798㎡[목록1과지분동일.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1,703,340 1,703,340	물건번호1과비고동일
	5	동소 519-1 1471㎡[목록1과지분동일]	전	1,960,110 1,960,110	일괄매각.목록6~8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동소520 327㎡[목록1과지분동일]	전		
		동소521 271㎡[목록1과지분동일][물건번호5:목록6~8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6	동소 524-1 843㎡[목록1과지분동일.지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382,110 382,110	일괄매각.목록9,10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동소 524-2 367㎡[목록1과지분동일.지분매각]	임야		
2020타경8171	1	북구 망월동 1080 2370㎡[공유자백승기지분4/156전부] 제시외 수목[농지취득자격증명요.제시외수목포함]	답	17,421,560 17,421,560	소유권불명한제시외건물[지하수이용시설]매각제외
2020타경9181	1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 189 106㎡[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9,222,000 9,222,000	소유불명목조천막지붕매각제외
	2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322-2 889㎡[공유자김용덕지분1/3전부] 제시외 감나무 등 1식[소유불명비닐하우스매각제외.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42,960,900 42,960,9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제시외수목매각포함
2020타경66429	1	장성군남면월곡리1002-12 2784㎡[소유자김중권지분중331/3445.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32,366,290 32,366,290	식재된다량유실수매각제외
2020타경67330	1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624 975㎡	전	2,145,000 2,145,000	
	2	동소 654 142㎡	전	312,400 312,400	
	3	동소 658 2056㎡	대	5,140,000 5,140,000	
2020타경67477	1	화순군 화순읍 계소리 174-1 1334㎡	답	320,160,000 320,16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69039	1	나주시 경현동 352 402㎡	전	20,582,400 20,582,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69596	1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산71-3 11802㎡[공유자이현성지분1/3전부.분묘소재로인해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임야	3,894,660 3,894,66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2	동소 13 1008㎡[공유자이현성지분1/3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4,032,000 4,032,000	물건번호1과비고동일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0타경7185	1	동구 충장로5가 38-1 57.3㎡	대	4,789,838,150 4,789,838,15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구 충장로5가 38-4 13.5㎡	대		
		동구 금남로5가 128 508.8㎡	대		
		동구 금남로 184 소극장,사무실,다방,주차장1층365.41㎡[사무실] 2~6층각363.12㎡[사무실] 7층363.12㎡[주차장] 지하다방 356.04㎡ 제시외 창고 29.8㎡	업무시설		
2020타경8775	1	서구 월드컵4강로158번길 15-12 [7가구] 1층9.89㎡[주차장] 2~3층각61.20㎡[각3가구] 4층64.80㎡[1가구] 제시외 발코니 등 115.92㎡	주택	161,947,840 161,947,840	제시외건물포함.본건건물위해매각외대지에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자동차,중기]					
2020타경6977	1	사용본거지:광주 광산구 목련로273번안길30, 408동802호[운남동,주공아파트] 등록번호:83소0830 차명:봉고Ⅲ1.2톤연식:2019	자동차	15,000,000 15,000,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0. 12. 15.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0. 12. 22.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2.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민우